

지방기업의 창조경제 대응실태와 정책과제 조사

弘報室 : (02)
6050-3602~5

* 이 자료는 **7/29(月)자 朝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인터넷 등은 **7/28(日) 11:00부터**

※ 문의 : 지역경제팀 최규종 팀장(6050-3491), 강수정 대리(6050-3494)

지방기업 94% “창조경제 필요” ... “추진 의향 있어” 61%

- 대한상의 조사 ... ‘기술혁신’(44%), ‘타산업과 융합’(24%), ‘IT·SW 접목’(16%)에 관심
- 지방 R&D 역량, 수도권보다 ‘낮다’(50%) > ‘높다’(14%)
- 지방기업 56% ‘연구인력 채용에 애로’ 경험, 30대/석사급 인력이 제일 부족
- 창조경제활성화 정책과제 : ‘산학연·기업간 협력풍토 강화’(21%), ‘융복합 막는 규제개선’(20%) 順

지방기업 대부분은 창조경제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절반 이상의 기업이 기술혁신, 융합 등 창조경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수도권 이외의 지방소재 제조기업 400개사(매출액 상위업체)를 대상으로 ‘창조경제 대응실태와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창조경제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미래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이 93.6%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필요하지 않다’ 6.4%>

이들 기업에게 산업간 융복합, 기술혁신 등 창조경제 관련 사업에 나설 의향을 물은 결과에서 도, ‘의향이 있다’(61.1%)는 응답이 ‘없다’(38.9%)는 답변보다 많이 나왔다.

대한상의는 “새정부가 창조경제 정책을 표방한 영향도 있지만 후발국의 도전, 기존 추격형 전략의 한계 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지방기업들 역시 창의와 혁신활동에 주목하는 것 같다”며 “국내기업들이 시장선도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는 창조경제와 관련해 기업이 바라는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창조경제를 추진하겠다는 기업은 관심분야로 ‘기술혁신’(43.8%), ‘산업간 융합’(24.2%), ‘IT, SW와 접목’(15.8%), ‘디자인·컨텐츠 강화’(13.0%)를 주로 꼽았으며, <문화예술·인문학과의 융합’ 3.2%> 추

진방식으로는 '정부사업 활용'(30.5%), '독자 추진'(20.4%), '다른 기업과 공동투자'(19.8%), '유망 기업 M&A'(12.2%)를 선호하고 있었다. <첨단기법 도입' 10.7%, '외부 위탁' 6.4%>

창조경제를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그 이유로 '투자자금 부담'(47.1%)을 가장 많이 꼽았고 '내부공감대 미흡'(15.0%), '생소한 개념으로 이해부족'(12.4%), '관련 제도 및 인프라 미비'(9.9%), '추진경험 부족'(9.2%), '기술력 낙후'(6.4%) 등을 차례로 들었다.

지방기업의 연구개발(R&D) 수준이 수도권에 비해 취약한 것도 창조경제 활성화의 걸림돌로 나타났다. 수도권 동종업체와 비교한 자사의 연구개발 수준에 대해 '더 높다'는 응답은 13.5%에 그친 반면 '뒤쳐진다'는 응답은 50.1%에 달했다. <'비슷하다' 36.4%>

연구개발 역량 중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시제품 개발'(27.5%), '기초연구'(24.9%), '제품양산'(20.1%), '제품기획'(15.5%), '사후성과 관리'(11.7%)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 <'기타' 0.3%>

지방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인력운용 애로'(48.6%)를 꼽았으며 이어 '시장동향 등 정보파악 곤란'(12.5%), '협소한 시장'(12.2%), '협력 네트워크·협업 풍토 미비'(10.9%) 등을 들었다. <'외부전문기관의 역량 미흡' 5.9%, '지자체의 관심 부족' 5.6%, '관련 서비스 낙후' 4.3%>

실제 지방기업의 절반 이상(56.2%)은 '연구개발 인력을 채용하는데 곤란을 겪는다'고 답하였고, <'곤란을 겪은 적 없다' 43.8%> 연구개발 인력 중 부족한 연령대는 '30대'(48.6%)와 '20대'(38.9%), <'40대' 11.5%, '50대 이상' 1.0%> 부족한 학력 수준은 '석사급'(39.4%), '대학급'(37.7%), '박사급'(19.1%)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출인력' 2.0%, '고졸인력' 1.8%>

대한상의는 "연구개발은 창조경제의 핵심 중 하나인데 작년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예산에서 대전을 제외한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28.5%에 그쳤으며 우수인력이 지방기업을 외면하는 것도 문제"라며 "지방의 연구개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지방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33.3%), '연구개발 금융지원 확대'(18.8%), '기술투자 세제혜택 강화'(17.6%), '기술인력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11.5%), '연구소 및 대학 역량 강화'(10.9%) 등을 차례로 꼽았다. <'중앙정부주도 R&D체계 개선' 4.3%,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3.6%>

끝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는 '산학연 기업간 협력풍토 강화'(20.9%), '융·복합화를 가로막는 규제개선'(19.8%),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분위기 조성'(19.3%)을 순서대로 답했다. <컨설팅 강화' 13.0%,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12.7%, '창의적 교육시스템 구축' 10.4%, '기타' 3.9%>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국가경제의 근간인 지방에서 창조적 경영활동이 이루어져야 새정부가 표방하는 창조경제가 정착되고 본격화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지방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자금과 세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지방 기술인력에 양질의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등 유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정부도 창조경영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가 정신이 발현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7/2(화)~7/17(수)
- 조사대상 : 수도권 이외 지방소재 제조업 400사 (매출액 상위업체)
- 조사방법 : 전화 및 팩스